

유럽 경제위기와 한국의 과제

현정택 |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무역위원회 위원장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www.igenet.com

자료문의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현재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에서 촉발된 유럽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7월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세계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유로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¹⁾ 1997년 말 동남아시아로부터 파급된 외환위기를 맞았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이제 유럽 경제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유럽 경제위기는 단일통화체제에서 오는 경쟁력 하락,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누적, 유럽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발생한 것이다. 유로를 채택하기 이전 남부유럽은 그리스 드라마, 이탈리아 리라 등 약세 통화를 바탕으로 수출했지만 독일 등과 합쳐져 강세인 단일통화체제가 되면서 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다는

1) 6쪽

지적이 있다. 단일통화인 유로 채택으로 각국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케인즈 이래의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양대 수단 중에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아있는 재정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유럽 경제위기의 핵심에는 재정적자 문제가 있다. OECD에 따르면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의 10.5%, 아일랜드는 31.2%에 달했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였다. 유럽 각국은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긴축재정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이 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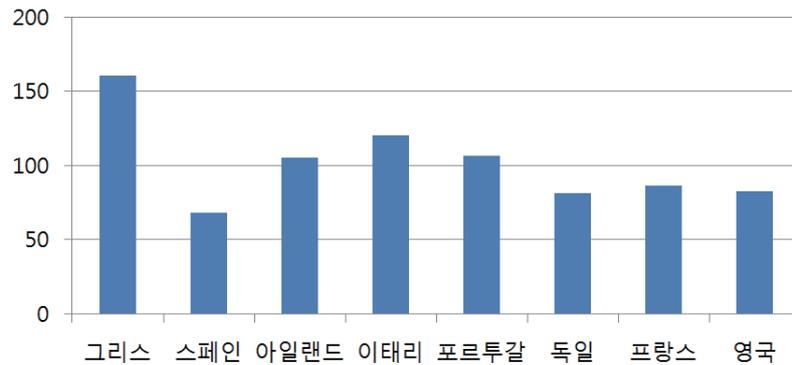
유럽 각국의 GDP 중 재정적자 비율(%)

	2010	2011	2012	2013
그리스	10.5	9.2	7.4	4.9
스페인	9.3	8.5	5.4	3.3
아일랜드	31.2	13.0	8.4	7.6
이태리	4.5	3.8	1.7	0.6
포르투갈	9.8	4.2	4.6	3.5
독일	4.3	1.0	0.9	0.6
프랑스	7.1	5.2	4.5	3.0
영국	10.3	8.4	7.7	6.6

자료: OECD, 2012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GDP의 160%에 달한 것을 비롯해 이탈리아 120%, 포르투갈 106% 등 스페인을 제외한 남부유럽 국가들 모두 100%가 넘는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유럽 경제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가 되었으며 이른바 ‘질서 있는 디폴트(orderly default)’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탕감해주고 금융지원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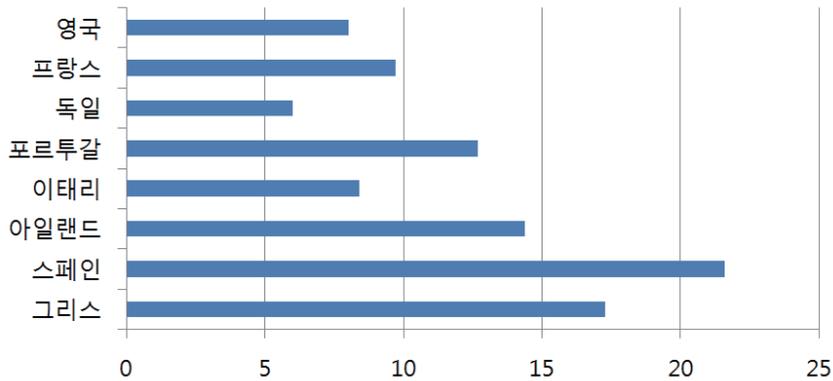


자료: IMF, 2012

유럽위기의 원인이 재정적자라는 데는 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2012년 5월 프랑스의 올랑드(Hollande) 사회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등 유럽의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도 했고,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같은 학자들도 이러한 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럽의 국가부채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일본의 229%에 비해 낮고 미국의 102%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2006년 재정이 흑자였고 독일은 적자였으며 따라서 최근의 적자 증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세수는 줄고 지출이 늘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재정적자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해석이다.

근본적으로 유럽의 경제문제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성장잠재력을 잃었기 때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유럽의 실업률 수준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아 두 자릿수가 넘는 나라가 많으며 스페인의 경우에는 21.6%에 달한다. 다섯 명에 한 명 꼴로 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이며 이렇고도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현상일 것이다. 독일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 고실업 문제를 겪었으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한 것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별 실업률(%)



자료: IMF, 2012

유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과 세계의 지도자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IMF 대출금을 포함해 1조 유로의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²⁾ 이 기금이 한시적인 것을 감안해 항구적인 기구로서 2013년부터는 유럽안정기구를 설립키로 했으나 필요한 절차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

이 밖에 유럽중앙은행은 장기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민간 은행에 자금 확충 및 채권 매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유럽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자 보다 더 급격한 조치들이 제안되었는데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주장한 유로본드 발행이 그 중 하나다.³⁾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국채발행이 어려워 정부의 재정위기가 증폭되고,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도가 이미 떨어진 개별 국가의 이름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EU채권을 발행하자는 취지다.

한편, 독일은 유럽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적자국들이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은 개별 국가가 재정주권을 포기하고 EU 책임으로 운영하는 재정통합을 이룩

2) 2010년 5월 그리스사태 발생 이후 EU 27개국이 합의해 설치되었으며,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등에 지원했고, 당초 4,400억 유로가 목표였으나 추가자금 필요에 따라 1조 유로로 확대키로 했다.

3) 원래 유로본드(Euro bond)는 발행시장의 통화 이외의 제3국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위기의 극복과 관련해 나온 유로본드는 개별 국가의 국채를 대체해 EU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자는 아이디어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로본드나 재정통합은 현 단계에서는 국가간 입장 차이로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앞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금융동맹(banking union)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예금보호제도와 금융감독기구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유로 전체적으로 통합해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문제로 인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현상 가능성을 줄여줄 방안으로 보이며 EU 국가들도 원칙적인 합의를 본 사항이지만 예금보호기금 분담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유럽 경제위기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개념상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가장 낙관적으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문제가 조기에 풀리고 유럽 및 세계경제가 V자 형의 빠른 회복 길로 들어서는 것인데, 그동안 누적되어온 재정적자의 규모나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결함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둘째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같은 일이 일어나며 이를 도화선으로 유로존이 붕괴되고 그 결과 1930년대 같은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EU의 역내 교역이 6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로의 중심국가인 독일은 물론 남부유럽이나 동유럽 등 유로의 멤버들도 단일통화에 의한 편리함과 혜택을 선뜻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EU조약에도 유로의 가입절차는 있지만 탈퇴나 해체 조항은 없다. 따라서 한두 나라의 퇴출 가능성은 몰라도 유로체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므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문제국가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해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L자형의 침체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⁴⁾

유럽 경제위기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여파는 수출의 감소다. 2012년 1월 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한국의 대 EU 수출은 15.2% 감소했으며 EU 시장 축소의 간접적 효과로 대 중국 수출도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1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 대열에 들어섰는데 2012년 7월말까지 수출이 0.8% 감소해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시 1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EU 충격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적극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4) 정책담당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뱅크런 같은 시장의 힘에 의해 유로존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의 수출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2.2%인데 이들 지역 중 성장 전망이 있는 곳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세안(ASEAN)은 우리 수출에서 14%를 차지해 미국보다도 큰데 2012년에 10.9%의 수출 증가를 보였다. 중동지역 수출도 6.8% 증가했는데 이는 석유제품 가격이 2011년에 비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FTA를 체결해야 한다. 현재 대 중국 수출은 상당부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 수출의 성격이 많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소득 증가와 글로벌 불균형 축소 노력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 및 비중

(2012. 1. 1~7. 20)

	증가율(%)	비중(%)
합계	0.4	100
선진국	0	27.8
개도국	0.7	72.2
중국	-1.4	23.2
ASEAN	10.9	14
일본	3.4	7.1
미국	10.2	11.1
EU	-15.2	9.3
중동	17.5	6.8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FTA는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를 이미 보여준 바 있다. 한-EU FTA 이전부터 무관세 품목으로 FTA 혜택 품목이 아니었던 선박은 유럽위기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비해 FTA 이후 관세 감면 효과를 본 자동차 부문은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12년 7월 20일까지 10.2% 늘어났는데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미 FTA의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유럽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 유럽계 자금의 이탈을 가져온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은행들이

부실채권 발생으로 자기자본을 제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에 따라 한국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해 가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는 10~11월 두 달 사이에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한국에서 해외로 이탈한 적이 있다.⁵⁾ 현재 한국에 들어온 자금의 절반 정도가 유럽계 자금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한 자금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한국은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상황을 돌파했다.

그 후 일본, 중국과도 합의를 이루어 현재로서는 이들 3국과 각각 3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까지의 통화를 바꾸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치앙마이 다자화(CMIM) 합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다자협력스와프도 가능하다. 그리스 탈퇴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합의된 자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채널을 원활히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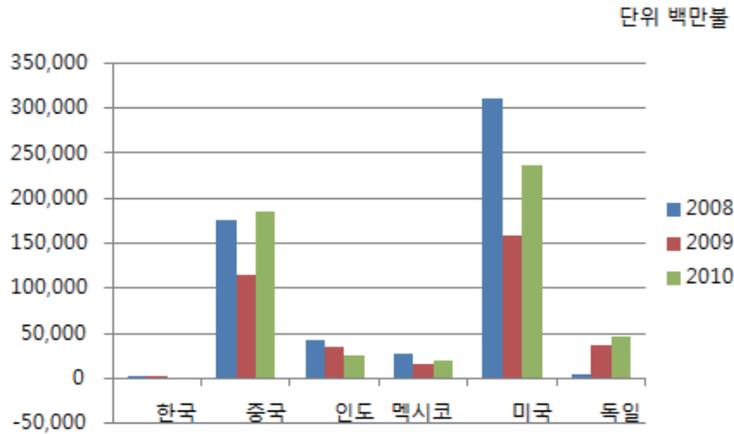
금융기관들도 차입금의 롤오버(roll over) 비율을 높이는 등의 외화 확보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뱅크런이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자금 공급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금융위기에 취약한 것은 자본 유출입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자금은 대부분 증권투자나 은행차입 형태인데 이런 자본 흐름은 대외 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증권투자는 2006년과 2007년 200억 달러 이상의 순유출을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09년 497억 달러의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유럽발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1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주로 은행의 차입거래로 이루어지는 기타 투자는 2006년, 2007년 각각 40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보이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100억 달러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안정적 자본유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매우 미미하며 자금철수를 뺀 순유입 기준으로는 거의 제로 상태로서 중국은 물론 인도, 멕시코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진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들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5) 한국은행 국제수지표(2008년 10월, 11월)

주요 국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금액 (순투자유치액수: 도착-철수)



자료: IMF data bank

한편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G20 회의 등에서 많은 국제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세금인 토빈세(Tobin tax)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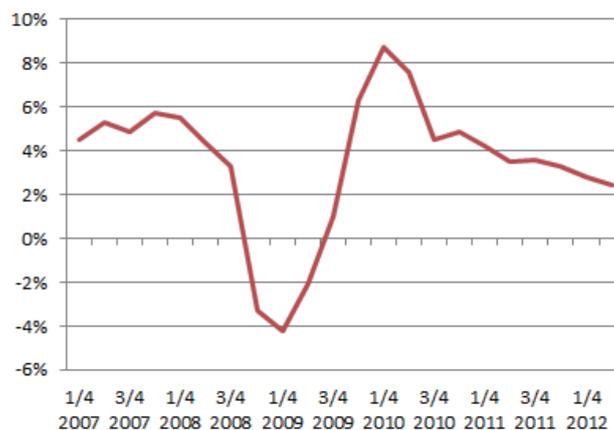
한국, 캐나다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적극성을 띠었지만 미국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반대해 국제규범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국은 개별적으로 제한적인 수수료 부담 제고 등 자본 유출입에 대응해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자본 유출입에 대한 장치는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신인도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를 기피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는 것이 최선이다.

유럽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힘든 부분은 재정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 경제위기의 원인이 방만한 재정지출에서 온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럽 스스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재정건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한국에서도 중기 재정건진성의 강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극복한 비결도 평소 국가부채가 OECD 평균의 절반

도 안 되는 30%대 수준으로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해 위기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우선권을 두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2012년 GDP 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가능성⁶⁾이 클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는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분기에 8.7%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그 이후 낮아져 2011년 4분기 3.3%, 2012년 1분기는 2.8%, 2분기는 2.4%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4% 내외 수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따라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한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기부양 논란은 우리나라는 물론 IMF 및 다른 국가의 위기 대응 때도 있어 왔는데 그 대응 방식이 되짚어 보면 매우 흥미롭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는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력한 재정지출 축소와 금융긴축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그 조건들이 추후 수정되고 한국이 위기를 극복했지만 당시

6) 2012년 7월 한국은행은 성장률전망을 3.5%에서 3.0%로 조정했는데, 여러 조건을 전제로 한 전망이므로 실제로는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의 가혹한 긴축정책으로 실업의 발생 등 문제가 야기되고 이후 회원국들이 구제금융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반대로 재정, 통화 등 양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적극 실시할 것을 건의했으며 한국도 29조원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했다. 2010년 그리스의 유럽연합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는 긴축 약속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 상황을 보이며 합의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규모가 큰 나라의 문제가 발생하고 유럽의 정치 지형도 달라진 2012년에는 긴축 기조에서 경기부양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6월 28-29일 유럽정상회의에서 GDP의 1%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의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IMF는 미국에서도 재정 감축 목표에 묶여 파탄이 나는 재정 절벽(fiscal cliff)⁷⁾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부와 의회가 타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부양책 추진 여부와 정도는 경기침체의 지속 기간과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에 비추어 보면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케인즈 식의 재정 부양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성장률이 현재 추세대로 떨어지게 놔둔다면 세수 등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잠재성장률 자체도 추락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등에서도 유럽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12년 7월 8조 5,000억원의 추가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세계경제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규모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 장기적인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 같은 지방재정의 위험도를 높이는 사업도 자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수준을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경제의 체질 개선이 유럽 경제위기는 물론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7) 미국은 입법 사항으로 재정 감축 목표가 주어졌는데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2012년 말까지 수정합의가 없다면 미국의 재정지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를 fiscal cliff로 표현한다.



현정택 (玄定澤, Jung Taik HYUN)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무역위원회 위원장

1949년 출생

- 1967~1971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 1980~1982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영학 석사
- 1987~1993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 1997~1998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경제공사
- 1998~1999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 1999~2001 대통령비서실 정책1 비서관
- 2001~2002 초대 여성부 차관
- 2002~2003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2003~2005 외교통상부 대외직명 대사(경제통상)
- 2005~2009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저서, 논문, 상훈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효과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KDI 정책포럼》(한국개발연구원, 2006)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World Bank Industry Development Division」(1988)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외 다수.

근정포장(1987), 황조근정훈장(규제개혁 유공 포상, 1999)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IGE

MEMBERSHIP GUIDE

법인 회원

- 1 구좌당 연 1,000만원 (중소기업 연 50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개인 회원

- 1 구좌당 연 3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학생회원 (대학원 및 대학생)

- 1 구좌당 연 5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이메일 서비스

※ 모든 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가입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 02-551-3334~7

F 02-551-3339

E-mail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